

<‘협업’ ‘협치’ ‘거버넌스’를 말하기 ; 민관거버넌스 경험을 중심으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90년대 들어서며 전 지구적인 냉전 종식과 세계화 가속화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무엇보다 다양한 시민적 욕구분출은 기존 정부 구조, 추진체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만나게 된다. 즉, 일원적인 국가 주도적 통치방식과 중앙정부 중심의 조정양식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진다(박은하, 2020).

이에 대해 20세기 후반 이후 여러 나라 등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공공관리 전략으로 도입된 거버넌스는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정책 결정 방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한국은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던 폭압의 정치를 끝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국민주권임을 경험을 통해 집적해 낸 시간이자 직접민주주의 경험과 숙의 과정의 중요성을 체득해낸 시간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의제 중심의 시민조직들이 결성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NGO, NPO 등의 활동이 이어지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사의 배경과 경험은 민-민, 민-관 등을 연결해 내는 거버넌스라는 형식이 우리에게 익숙하며 수용적인 운영모델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제 중심의 협업경험이 ‘지역’에도 널리 지속하고 있음이다.

‘지역자치’는 이러한 사회변화의 대응전략으로써 외견상 중앙정부와의 수평적 운영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때 ‘지역(the local)’이란 중앙-수도권(the centre)이라는 독점적인 권력 공간과 대응되는 사회·경제·정치적으로 불평등한 비중앙-주변부-풀뿌리 일상의 삶의 터(허성우, 2006:171)라 정의되고 있다. 여기에서 경기도는 일반적 정의로써 ‘지역’으로 위치성을 가짐과 ‘수도권’ 즉, ‘중앙’에 포섭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는 지역이 가지는 의제 독자성 또는 주요 정책의제가 담론을 형성하는데 중앙(서울)으로부터 즉자적인 영향을 받는 동시에 ‘지역’이 갖는 특성과 한계 또한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화’ 담론형성을 통해 ‘자치’와 ‘분권’의 실질적 권한 행사에 있어 중층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기반에서 지역의 주체적 정책 담론을 형성하고 행위로서 어떤 운영방식을 택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민관거버넌스는 그 어느 ‘지역’보다 깊이 있게 논의되고 기존 경험치가 적극적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과정과 운영에 있어서 발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선 6기 연정과 민선 7기 민관협치의 경험은 지난 지방정부의 정치 행위 정도로 분석되거나 과제으로써 의미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버넌스 구조와 형식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정부 운영에서의 주요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모델은 다양한 거버넌스 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근거로써 작용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러하다.

또 다른 내용적인 면에서 민-민, 민-관 거버넌스 사례를 보면 경기도 내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하고 그 조직이 다시 연대하는 경기여성네트워크가 있다. 상이한 활동 이력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차이를 인정하며 구성해 낸 민-민 거버넌스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일상의 협업은 지역의 여성단체들 간 현안이 동시에 논의되거나 실행되는 경험을 공히 갖게 된다. 여기에 도 예산이 일정 부분 배치된다. 이 조직된 힘에 더해 도의회 여성의원, 그리고 행정조직이 협업하는 형태의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민-관 거버넌스 구조로 운영된 지 12년에 이르고 있다. 발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풀뿌리 시민단체 지원 강화 측면과 동시에 진전된 정책사업을 도출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성의 정치대표성의 낮은 수준(11대 도의회 여성비율 22.4%)을 감안할 때 민관거버넌스는 정책 실행에 있어서 보완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그리고 무엇으로 거버넌스 할 것인가에 있다.

성평등 의제와 관련한 예만으로도 민관거버넌스 필요성은 절대적 시간과 만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몇 자의 언설로 도배된 정치인들의 성평등 의식 없음과 사회적 성찰 없음은 역설적으로 지역에서 성평등 의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배치하고 관련 제도의 보완을 통해 진전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갈 것인가 질문이 생겼다. 즉,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우리 사회 구조적인 성차별적 상황 등을 해소해 나가며 공동의 지속가능한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라는 점이다. 열악한 여성노동 환경,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여성살해/온라인 기반으로 벌어지는 디지털 성폭력/성매매 등등 젠더 폭력의 양상은 훨씬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적이다. 사회경제가 어려워수록 그 빈도는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할 때 단순히 기존 제도에 기대어 행정력으로 방어막을 만들어내기에는 이미 그 수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위와 같이 상존하는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들은 거듭 밝히거니와 현 행정조직만으로 해결해 가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 단위의 의견들이 의회와 행정부서와 공유, 반영되는 경험은 지속가능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행정 담론을 형성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책적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창구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관거버넌스 확산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과 역할을 위해서는 조직된 시민의 역량 강화와 동시에 경기도 공조직 내 민관거버넌스 역량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도록, 상호신뢰에 바탕한 도민의 능동성을 추동하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역할이 곧 도민의 권리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조하건대, 형식적인 협업, 행정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는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의 목적을 적극적으로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의 핵심적 가치는 바로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있다는 점에서 민선 8기의 ‘협치 가치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민선7기에서 남긴 과제를 민관협치 활성화의 방향을 세우는 1안으로 다뤄 민선 8기의 민관거버넌스의 출발선으로 삼길 제안한다. 여기에 더해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실효적 조치 강화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다른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등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실효적 조치 강화가 그것이다. 이는 다양한 도민의 참여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자 지역 현안의 접근과 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민관거버넌스 구체적인 경험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도래한 코로나-19팬데믹 이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당장 닥친 경제·사회문화를 망라한 일상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지속가능성을 전망할 것인가에 있다. 즉 성장동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미래 시점과 오늘을 먹고 사는 현재 시점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음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단회성 행사, 특정 사업의 단순 지원 형식을 ‘협업’으로 한정 짓는다면 민관거버넌스 모델은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왜곡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공조직에서는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지 말 것, 자문을 구하듯이 또는 민원인 대하듯이 하지 말 것, 의제발굴을 위한 도민의 자료수집 등 학습의 기회마련에 예산을 들 것,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지역에 기반한 전문가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 및 민관거버넌스 운영에서의 권한 강화 등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에서 나타나는 ‘협치’의 의지가 공조직 내 고루 공유되고 즉 인적자원 강화, 정책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이 공조직 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전제다.

<민선8기, 경기도 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의원 김현삼

1. 민선7기(2014~2018) 경기연정의 추억

-경기연정은 정치문화를 바꾼 소중한 협치의 경험이었습니다. 연정을 하면서 경기도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갈등의 정치가 상생의 정치로, 불통의 정치가 소통의 정치로, 소외의 정치가 참여의 정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연정은 정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도민행복'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연정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연정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합니다. 시도가 갖었던 긍정 이면에 많은 한계를 노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도민들은 정치권이 제발 싸우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에 부응하는 상생과 협력의 정치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이고, 이것이 근래에 들어 하나의 시대정신으로까지 발전한 점은 역사의 진보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나는 연정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당시 함께 고민했고 실천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지도부 그리고 시민사회 관계자들에게 이 자릴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연정은 고통스런 과정을 내포합니다. 갈등과 대립에 기반한 한국의 정치문화는 비단 여의도 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정치 곳곳에서도 오랫동안 지배이념으로 자리잡으면서, '싸우지 않는 정치'가 낫설기도 하고 제도와 법률 등의 미미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는 연정을 추진할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발목을 잡는 한계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연정을 할 당시와 그렇지 않은 당시를 비교하면 연정을 통해 더욱 더 많은 공적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성과있게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있게 2015년 메르스가 대한민국을 덮쳤을 때 당시 야당이 파견한 연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응TF가 효과적인 대처를 하였고 이러한 성과는 급기야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모델로 적극 도입함으로써 '지방이 국가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정당간 오랜 쟁점이었던 무상급식에 관하여 '무상급식예산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인사 청문회를 실시하여 기관장 임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였으며, 일자리 예산의 경우 기존에 비해 세 배 이상 증액하여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일자리 증가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는 모두 협치라는 날개짓이 불러온 민생 성과였다.

2. 여의도 중심 기득권 정치의 위기

-나는 이 자리에서 여의도 중심 기득권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최근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20여 일이 경과되도록 원구성은 되지 않고 있으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소통과 타협의 부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여의도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극심한 여야 간 정쟁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주요 기능이지만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작 민의를 대변하는 일에서는 무능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이른바 4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정치권의 무능은 여의도 정치권에 속한 대통령 스스로 '대처 방법이 없다'고 실토했는데서 적나라하게 증명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당권을 둘러싼 논쟁이나 집권세력내에서의 해계모니를 선점하기 위한 쟁투에 그리고 전 정권을 손보고 말겠다는 식의 현 정권의 정치보복적 행보에는 너무나 적극적입니다. 여기에 국민은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의 소통 부족입니다. 소통의 의지가 없거나 효율적인 소통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법치주의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의도 중심 기득권 정치는 위기입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은 실종되고 후보의 비호감만이 부각되었던 대통령 선거, 똑 떨어진 지방선거 투표율, 일반 국민이 보기에 정치인들은 경쟁자에게 '적폐 세력', '내로남불'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서로 존재 이유 자체를 공공연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공존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증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대에 대한 적대적 규정과 낙인이 지지자 사이에 퍼지고, 이런 생각으로 무장한 지지자들이 더 강하게 상대를 부정하면서 적대적 선동을 하는 정치인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 강고한 일체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강성 정치인이 강성 지지자들을 만들고, 그런 강성 지지자의 환호가 정치인들의 더 강한 발언과 선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영정치의 모습이며 그 결과는 상호 관용 없는 사회, 갈등과 분열, 떼법으로 무장한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는 반이성적 사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게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말한 정치의 위기는 극복될 것인가? 불행히도 내가 보기엔 앞으로도 상당부분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기득권을 내려 놓으려고 하지 않는 여의도식 정치에 익숙한 정치인들이 있는 한, 관료중심 질서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고급관료 중심의 의사결정체계가 유지되는 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로서는 위에서 말한 4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외에 저성장이 지속되는 경기침체, 좋은 일자리의 절대적 부족, 비정규직의 확대, 소득의 불평등과 자산격차의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요즘 특

히 심화되는 세대 갈등, 전 세계적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등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3. 지방자치가 답이다.

-그래서 나는 변화의 희망을 지방자치에서 찾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방자치는 현재의 법과 제도 아래서는 중앙정치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끝난 지방선거에서 왜 지방선거 후보자 선정을 국회의원들이 완전 독식하는가? 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정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미국이 9.11 테러 당시 나름 효율적으로 재난을 수습할 수 있었던 건 현장의 소방책임자가 최고지도부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지휘하였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먼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시 청와대의 지시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상황수습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당시 경기도의 능동적 역할과 그 권한이 없었다면 사태는 필히 더 나쁜 상황으로 번졌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는 주민에게 여러 유무형의 위기의 순간에 이를 가장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미래비전을 내가 '참여'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주성에 기반한 주민재권의 가장 바람직한 행정단위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는 하위 행정단위(지방)에서 스스로 계획, 실행, 해결할 수 있는 사안 등에 관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결정하고 집행하는 30여 년에 걸친 소중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행정단위(국가)가 하위 행정단위의 자율성을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의 원칙들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통치 대상으로서의 국민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갖는 '시민'으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집합적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주민'으로 진화하는 지난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30여 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세력은 많은 성과를 냈고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극단적 대립과 갈등에 기반한 정치문화, 승자독식의 정치 및 선거제도,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미비, 지역토호세력들의 집요한 기득권지키기, 시민사회의 성숙 미비 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래 전 읽은 글귀가 떠오릅니다. "선진국 이어서 지방자치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해서 선진국이 되었다"는 모 정치학자의 지적은 우리가 왜 지방자치를 심화 발전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협치를 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세력이 힘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협치를 통한 정치교체 실현

-민선 8기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기도의회는 78:78로 여야 동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일방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기도민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여야는 물론이고 김동연 당선자도 연일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여야 지도부 역시도 연일 협치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의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짐만 한다고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협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놓고 괜한 감정대립과 있을 뿐입니다. 나는 여야 지도부가 '협치'가 갖는 본래의 의미를 잘 새겼으면 하는 바랍니다. 협치의 전체는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의장 직을 둘러싼 논쟁이 그것입니다. 각 당이 주장하는 전반기에 의장을 자당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백 번 옳은 이야기며 논거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결국 현재의 상태로 가면 의장 직을 둘러싼 갈등이 행여 각 당이 주장하는 협치의 정신을 실종시키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살을 내주되 뼈를 취하는 협상 전략을 선택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살이고 뼈인지는 판단할 문제입니다.

-협치는 단지 임박한 정치적 결과를 큰 탈 없이 넘어가고자 하는 정치적 술수로서가 아니라 도민의 명령이며 시대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 의석수가 어느 일방의 독주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민선6기와 민선7기의 경험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실시한 서구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는 영국과 독일 등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극심한 경쟁을 하더라도 해당 주에서는 협치를 통해 연정을 실시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다른 주나 중앙으로 전파되는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치의 선순환이 중앙정부로부터가 아니라 지방의 경험으로부터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민선6기 연정의 성과물 중 하나인 매르스에 대한 대처가 그러했고 또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었습니다. 재정전략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전략회의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휘둘리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예산편성의 커다란 지침을 스스로의 학습과 노력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보편화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전히 지방자치는 보편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 오랜 숙제를 앓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뛰어 넘어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이른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국가임을 천명하고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자치'를 하고자 했던 의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인구 1,400만의 경기도에서 민선8기 경기도정과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4년간 어떤 정치문화를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에 신물난 대한민국 국민들께 내 삶을 바꿔주는 유력한 수단으로써의 정치의 효능감을 갖게끔 할 것인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협치’에 대한 각 주체들의 접근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현재의 78:78의 상황을 별 탈 없이 헤쳐나가야 할 그 ‘무엇’ 정도의 인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선8기 경기도정을 관통하는 주요한 운영원리가 되어야 하며 의회 역시 갈등과 대립의 정치 문화에 싫증난 도민들께 경기도의회가 희망을 주고 한국정치를 변화시키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꼬리가 몸통을 흐드는’ 한국정치의 신기원을 통해 갈등과 대립에 기반한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상생과 협력에 기반하여 혁신적인 정치교체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길 기대합니다.

5.민선8기, 경기도 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

-협치가 단지 보여주기식 구호로써가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 도정의 주요 운영원리라는 인식에 합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도지사 당선인, 여야 도의원 당선인들 모두가 협치를 꼭 해야겠다고 도민들께 공표하고 있기에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협치는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자’는 다짐을 넘어 협력의 구체적 테이블을 구성해야 되는데 우선은 집행부와 의회 중심의 단극체계를 넘는 다극체계를 받아 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집행부, 의회,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 기업, 소외된 정치세력 등을 폭넓게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여 도민은 방관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본래 의미의 협치도 아닐 뿐더러 자칫하면 자기들만의 권력 나눠먹기로 비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협치가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 당의 정강·정책과 도지사 당선인 및 도의원 당선인들의 공약을 실현할 예산까지를 구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진행 정도에 따라 인사까지를 나누면 좋겠지만 이는 협치의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한편 협치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도정의 성공을 목표로 하지만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틀과 수준을 바꾸는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정치교체’의 구체적인 상들을 경기도에서부터 실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지방자치세력을 하나로 묶어 갈등과 대립에 기반한 기득권 중심의 여의도 정치를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정치문화로까지 혁신시키겠다는 목적의식을 갖

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당장 당선인 측과 경기도의회 여야 지도부 및 시민사회가 협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사전 준비모임 성격의 (가칭)‘경기도 협치실현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협치의 기본 전제는 당연하게도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당장 만납시다. 여기서 협치의 목적을 합의해내고 협치에 이르는 논의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또한 협치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협치 의제로 선정할지 등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협치만을 주장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론과 이행 경로 등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되는 ‘협치’는 결국 이미지 정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김동연 당선자와 156명 경기도의원 당선자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의 건투를 바랍니다.

<참고자료>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방안(김현삼, 안산신문 기고, 2017.6)

대한민국 최초 민생연합정치, 경기연정(경기도 연정협력국, 2018.5)

< 민선 8기 경기도 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 >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 회장

■ 협치를 가장한 ‘나눠먹기’는 결국 도민 우롱 정치다!!

- 민선 8기 경기도청의 출발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의석수를 거대 양당이 정확히 반으로 나눠갖게 되면서 ‘협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협치, 경기도의회 내 여야의 협치.
- 이런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협치를 가장한 나눠먹기’.
- 예를 들어 야당 의원들도 찬성할 수 있는 인사를 고민해 청문회에 안건으로 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야당 몫과 여당 몫으로 기관장 추천권을 나누는 것은 나눠먹기로 봐야.
제대로된 인사청문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의회의 본질적 기능 못하게 돼.
-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도의회 여야의원들에게 심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상식적인 예산편성과 민생을 돌보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여야에 예산의 일부를 떼어주고 실질적인 편성권 자체를 주는 것은 예산 나눠먹기로 봐야해. 결국 예산심의 기능 마비.
- 현재 경기도의회의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 지난 10대 경기도의회가 비정상.
- 11대 도의회 당선인들 잘 할 것 기대.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는 것이 정치. 서로 상생의 경쟁을 한다면 도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
- 지금까지의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의 행보는 협치를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지금의 행보가 앞으로 4년간의 도지사 행보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여.
- 11대 도의원 당선인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치’와 ‘민생’을 조화롭게 구분해 주었으면. 민생은 여야가 함께 챙기면서 정치적 경쟁과 토론은 건전히 이뤄져야.
- 민선 6기 당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연정, 좋은 참고자료. 연정 초기 ‘정책협의회 합의문’을 작성할 때까지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 이후 예산연정, 지방장관 등은 경계해야 할 본보기.
- 78대 78인 경기도의회. 청년 정치인들이 캐스팅보트가 돼야. 이번 11대 도의회에 20명의 2030 도의원 합류. 역대 가장 젊은 도의회.
- 이들은 선거 공천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 등 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당이 청년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국민들이 청년 정치인을 원했기 때문. 국민들이 청년 정치인을 원했던 이유를 명심해야. 선배의원, 나이가 많은 의원들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면 안돼. 당의 이해관계보다 민생을, 당론보다 소신에 따른 정치를 해주길.

- 당을 떠나 2030 도의원들 서로 교류하고 토론하는 모임 등을 추천. 그렇게 되면 청년 정치인들이 결국 11대 경기도의회 캐스팅보트가 될 것.

- 마지막으로, 제3의 정당이 없는 상황. 시민단체와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어. 도의원 1~2명의 선택에 따라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의원들과 교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도의회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3의 정당 역할을 시민단체가 해야 하는 상황.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

- 언론 역시 도의원들이 여론을 정확히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해야 해. 어느 때 보다 언론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언론인들 역시 언론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활동할 것을 당부.

< 민선 8기 경기도 협치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완기(경기시민연구소 울림)

0. 먼저 민선 4기부터 8기까지 20년간 경기도 정치지형과 연정, 협치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해 주신 주제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통해 경기도가 지방자치의 취지와 견제와 협력의 기본원리가 작동하는 얼마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사실과 경기도 협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민선 6기, 남경필지사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 연정을 제안하고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여 경기도연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평화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양측에서 9명씩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소통과 협치로 도정의 주요정책과 민생현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0. 민선7기, 이재명지사는 당선인 시절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구상은 협치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상생발전, 시민사회 활성화, 갈등조정역량 강화 등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는 소통협치국(민관협치과 포함)을 신설하고,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민관협치기본계획을 수립·집행하고 경기도정에 민관협치 협치시스템을 도입·확대하였습니다. 경기도민정책축제, 협력역량평가제도의 도입, 위원회 제도 등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권고안 채택,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이 민관협치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정을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실질적 협치는 아직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0. 민선8기, 경기도정에서 다시 협치가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당선인이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수위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과 함께 ▶ 따뜻한 혁신 ▶공감의 소통 ▶진정한 협치 등 당선인의 도정철학을 민선 8기 경기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0. 경기시민사회는 <경기도 혁신도정위원회 운영 및 협치체계 구현>를 2022년 지방선거 핵심정책과제로 제안하고 김동연후보자와 이를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협약서(5월 9일)를 채택하였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민의 다양한 의사가 도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장과 숙의 민주주의 실현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미 민선 6기 연정, 민선 7기 협치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민선8기에는 경기도정에 전면적인 협치시스템을 도입하고 <혁신도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협치를 확대한다. 도민과 도내 시민사회가 정책수요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 입안자가 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0. 민선8기, 경기도 협치는 정당간의 협치, 시·군과의 협치, 경기도민과의 협치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연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는 민선7기의 민관협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역할과 구성 >

- 위원회는 1.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및 공약 이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심의 자문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 내 기획조정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환경·교통위원회, 자치·교육위원회, 복지·여성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 정책평가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
- 기획조정위원회를 제외한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별 간사 2명을 두고, 기획조정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촉위원과 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이다.
-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분과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6회이다.

0 민선8기, 경기도정에 전면적인 협치시스템을 도입하고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선 7기의 <민관협치위원회>를 확대·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도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혁신도정위원회는 경기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과 도지사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위상을 가지는 위원회
- ▲ 경기도정의 전 분야를 망라해서 다양한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혁신도정위원회 구성
- ▲ 혁신도정위원회는 민관협치기구로 기능하며 위원회에는 전문가, 경기도민 및 시민사회 관계자, 경기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각계가 참여하고 각 분과위원회 운영
- ▲ 경기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역할 수행
- ▲ 경기도 혁신도정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총괄전담조직을 설치 및 운영